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한국기록관리학회 편, 아세아문화사, 2008)

이 현 정\*

기록학이 국내에 소개되고 새로운 학문분야로 발돋움하게 된 지 10여 년이 흘렀다. 그동안 국내 기록관리는 그 짧은 기간에 비약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먼저 공공기록관리영역에서는 기록관리법의 제개정, 대통령기록관리법(2007)의 제정을 통해 기록관리기준의 확립, 관리방식과 기술의 표준화, 기록관리 전문인력 배치 등 명실상부한 국가기록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민간 기록관리영역에서도 종교, 기업, 대학을 위시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과 같이 특정주제에 대한 기록관리를 담당하는 기록관이 설립되기도 하였다.

교육학술영역에서는 기록관리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체계가 도입되어 2009년 1월 현재 16개 대학원과 행정안전부 인가를 받은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998년 설립된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을 필두로 기록학의 전문화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학회도 설립

---

\*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되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기록학 분야의 번역서와 개론서의 출간 및 연구자들의 활발한 논문발표가 꾸준히 진행됨으로써 외국의 기록관리 이론과 선진사례의 소개와 더불어, 한국 기록관리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한 다양한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왔다.

이렇듯 기록학과 관련된 10여년 동안의 성과는 초기 마땅한 교재조차 부재했던 상황에 비취본다면 커다란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개론서의 경우 기록학에 대한 학문적 정의와 역사, 방법론 등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케 한다는 점에서 기록학 연구의 입문서로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 출간된 개론서는 크게 두부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외국-영국과 미국-의 개론서를 번역, 출간한 경우<sup>1)</sup>이고 다른 하나는 기록학 입문의 내용과 국내 기록관리 현황을 함께 소개하는 개인 혹은 공저, 편저로 이루어진 경우<sup>2)</sup>이다. 대부분 개론서의 내용은 기록관리 및 기록학의 역사, 기록관리방법, 교육프로그램, 기록관리직의 역할, 법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전자인 번역된 개론서의 경우 선진 기록관리 이론과 실무지침 등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번역서로서 의미전달상 적절한 대역어의 부재와 한국의 기록관리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기록학 입문서로서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후자의 경우도 번역어로서 대역어의 일관성 부재와 부적절함은 공히 지적되어 오고 있는 바이며, 구성과 내용에 있어서도 저자(들)의 전공연구영역에 따라 특화되어

---

1) Theodore R. Schellenberg 저, 이원영 역, 『현대기록학개론』, 진리탐구, 2002, Candy Schwartz 저, 강순애 역, 『기록관리론』, 아세아문화사, 2002, Caroline Williams 저, 남태우 역, 『기록관리학의 이해』, 태일사, 2008

2) 최정태, 『기록학개론(개정증보)』, 아세아문화사, 2006, 한미경·노영희, 『기록관리학의 이해』, 진리탐구, 2007, 김정하, 『기록물관리학개론』, 아카넷, 2007, 김상호, 『기록보존론(증보판)』, 아세아문화사, 2007

개론서로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이 소략 또는 결여되거나 형식에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기록관리학회 편 『기록관리론』의 출간은 지난 10여 년간의 국내 기록학계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개론서로서 목적에 부합하는 충실한 목차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록으로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관련 주요법률과 ICA 아키비스트 윤리강령을 제공하고 있다. 저자들<sup>3)</sup>은 기록학과 문헌정보학에서 기록관리를 강의하면서 관련 저서 및 연구논문을 발표한 학자들로서 이러한 연구성과를 본서에 형식에 맞게 담아내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은 기록과 사회에 관한 것으로, 기록과 기록관리의 가치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최근 기록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기술하고 있다. 기록의 가치를 Shepherd와 Yeo가 주장한 업무적 활용성, 대내외적 설명책임의 지원, 문화적 활용성을 근간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사회가 공공의 선을 지향하고 투명하고 책임성을 갖게 해주는 데 기록관리가 필수적 인프라이고, 최근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가 강조되는 환경에서 체계적인 기록관리의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2장은 기록과 기록관리로서, 먼저 기록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록의 속성을 ISO 15489에 의거하여 설명하고 기록관리의 기본 원칙인 출처의 원칙과 원질서 존중의 원칙을 정리하였다. 두 번

---

3) 기록관리론의 목차에 따라 저자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상완(제1장), 강순애·정경희(제2장), 서은경·김희정(제3장), 실문원(제4장), 광승진·이성숙·김순희(제5장), 이소연(제6장), 남영준·김유승·정재영(제7장), 서혜란(제8장), 송정숙·정연경(제9장), 서은경·김양우(제10장)

책로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기록관리 역사와 배경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한국 기록관리 역사는 따로 절을 두어 고려·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기록관리법 제정이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전문적인 학문영역으로 정착, 발전한 기록관리학에 대해 그 발전과정과 기록관리학에 대한 정의, 연구영역, 기록관리학의 학제성, 기록관리전문가에 대한 정의와 임무, 지식 등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3장은 기록의 선별과 평가에 관한 것으로, 기록에 가치와 의미에 중요성을 부여하여 보존되어야 할 기록을 식별하는 기록의 평가선별에 대한 개념과 이론을 쉘렌버그, 젠킨슨으로 대표되는 고전적 입론과 붐스, 쿡 등에 의한 거시평가흐름 등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수집과 선별의 기반이 되는 정책과 평가결정을 객관화하며 평가과정을 체계화시키는 평가정책과 절차를 다루고 영국·미국·캐나다·호주·한국의 평가 기준 및 재평가와 처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제4장은 분류와 기술로 준현용기록과 보존기록으로 나누어 전자는 분류와 넓은 의미의 기술인 메타데이터를 중심으로, 후자는 정리, 기술, 전거제어, 검색도구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준현용기록의 조직화는 ISO 15489의 원칙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분류체계 개발방법으로 DIRKS 방법론을 소개하고 전자기록의 계층구조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기록분류체계 및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으로는 ISO 23081을 소개하고 있다. 보존기록의 경우 정리의 개념과 원칙, 보존기록의 기술원칙과 특징, ISAD(G)와 각국의 보존기록기술규칙을 소개하고, 전거레코드의 역할과 특성, ISAAR(CPF)와 표준화된 보존기록 검색도구를 전자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개발된 인코딩 표준인 EAD와 EAC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국 보존기관의 검

색도구도 소개하고 있다.

제5장은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것으로 기록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 기록정보서비스의 개념과 정보서비스의 절차와 과정, 기록관의 접근정책과 구성요소, 지적접근과 물리적 접근의 제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잠재적 이용자에게 정보제공 및 서비스 확대를 도모하는 온라인 서비스와 시공간의 제약없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디지털 정보서비스로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기록관을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의 특성과 이용행태를 소개하며 기록관이 소장자료와 제공기능을 잠재적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수행하는 확장서비스(outreach service)로서 전시, 출판, 교육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6장은 전자기록관리로서, 먼저 전자기록의 특성을 설명하고, 기록의 품질요소를 정리하였다. 또한 전자기록의 획득부터 처분까지 기록관리과정의 각 단계에 따라 ERMS 설계표준의 주요기능을 정리하였다. 한편 전자기록을 장기적으로 보존을 위해 InterPARES에서의 전자기록 장기적 보존원칙을 추출하여 원칙에 기반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구성한 내용을 검토하여 전자기록의 보존에 관한 주요 쟁점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저자는 말미에 진행중인 전자기록에 획득, 관리 및 보존에 대한 여러 성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구와 실험, 정책과 법제의 수립과 실천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제7장은 기록의 보존에 관한 것으로 보존이라는 용어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살펴보고 주로 개정된 기록관리법의 보존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종이기록·시청각기록·행정박물로 구분하여 보존매체의 특성, 보존환경과 위험요소, 재난관리를 비롯한 보존활동에 대해 정리하였다. 한편 디지털시대의 전자기록의 보존에 대해서 원래부터 디지털로 만들어진 자료에 대한 보존과 마

이그레이션, 에물레이션을 포함한 보존기술, ISO 14721을 언급하며 보존기술을 지원하는 메타데이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제8장은 기록관리법제에 대한 것으로 기록관리와 관련된 국내 법령 가운데 공공기록관리에 관련된 기본적 법률, 전자기록관리에 관련된 법률, 기록의 이용에 관련된 법률로 구분하여 7개를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공공기록관리에 관련된 기본적 법률로서 개정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 및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소개하였다. 전자기록관리에 관한 법률로는 전자정부법과 전자서명법을, 기록의 이용에 관련된 법률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기록관리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 전문직의 업무수행이 요구된다. 제9장은 전문직으로서의 기록관리직에 대한 것으로, 기록관리직의 역할과 기록관리직을 위한 구미 각국의 윤리강령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한편 기록관리 전문직의 양성을 위한 국내의 교육프로그램 및 교과과정의 사례를 살펴 기록관리 교육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및 훈련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10장은 공공기록관리 체제와 기관에 대한 것으로서 먼저 우리나라 기록관리체제를 기록관리법과 대통령기록법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각국의 기록관리기관의 현황과 운영현황, 대표적인 기록관리 단체와 기구의 현황 및 운영과 그 특성도 소개하고 있다.

기록관리와 관련된 개론서에는 기록관리학의 학문적 성격, 기록의 개념, 기록관리의 기본적인 방법과 절차, 기록관리 이론, 기록관리기관, 기록전문직의 사명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sup>4)</sup>이 필요하다. 이 책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국내에 출간된 기록학 개론서로서는 가장 충실한 목차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장 말미마다 간략한 핵심내용의 정리와 다시 생각해볼 문제, 참고문헌을 배치함으로써 토론식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기록학 관련 저서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오던 번역어로서 대역어의 부적절함과 일관성 부재라는 측면은 많이 해소된 것으로 생각된다. 간혹 사소한 일관성의 문제-예를 들어 ‘Authority Control’을 저자에 따라 ‘전거제어’ 또는 ‘전거통제’로 사용하는 등-은 이 책을 읽어가는데 있어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기록학용어사전(2008)의 출간이라는 기록학계의 성과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쉬움 점은 각 장의 기술수준에 편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어느 주제를 다루는 장은 소개 정도의 내용이라면, 어느 장은 개론서로서의 내용이라기보다 훨씬 깊게 주제를 정리,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의 기록학의 발전정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기록학의 연구영역이 모든 분야에 걸쳐 고루 발전한 것이 아니라 몇몇의 주제에 연구성과가 집중되어 있는 점이 기존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정리된 이 책에서도 드러난다고 보여진다.

또한 공저이기 때문에 각 장마다 통일성이 부족한 점도 보인

---

4) 명지대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교육방안 연구 용역보고서」, 국가기록원, 2006

다. 이 책의 미덕은 각 장의 주제영역과 연결하여 관련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면서 개정 기록관리법과 연결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제1장과 우리나라의 법제를 소개하는 제8장, 마지막 국내외 기록관리기관을 소개하는 제10장을 제외한다면, 각 장은 개념 정의, 방법론, 국내외 사례의 형식은 통일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정보서비스 부분과 보존부분은 이러한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 제5장 정보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예컨대 접근정책과 이용에 있어 국내외는 어떠한 법제와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지, 서비스의 실태, 비공개나 비밀기록의 취급 등의 내용이 미흡하다. 물론 제8장에 우리나라의 기록이용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는 단지 어떤 법이 기록 이용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일 뿐이므로, 실제 어떠한 절차와 정책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제7장 보존부분에서도 저자는 보존의 개념을 기록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물리적, 기술적 모든 제반 행위들의 통칭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나 보존을 위한 정책, 전략, 표준의 소개는 거의 없이 물리적, 기술적 보존활동 및 거의 모든 부분을 개정 기록관리법의 보존관련 조항을 소개하는데 할애하고 있다. 또한 제3장 선별과 평가부분에 있어서도 각국의 평가기준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만 실제영역에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각국의 사례를 언급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아쉬운 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기록학 입문자에게는 충실한 개론서로서, 그리고 관련 연구자에게는 국내 기록학의 그간 연구성과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앞으로 나



을 기록관리 개론서는 이 책의 목차와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향후 기대하는 바, 영구보존기록뿐만 아니라 현용기록관리의 범주를 포함한 기록학 전분야의 연구성과가 고르게 축적되어 이를 아우르는 개론서의 등장을 기다려 본다.